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4년(30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수험에 참고바랍니다.!!**

****기출문제에 해설영상**

: 유튜브(하영태 상법_경제법)/카톡방/서울법학원 자료실 또는 게시판 참조!

****출처표시(법무사용 교재: 하영태 저)**

◇상법강의(24년 3월/개정3판 2쇄: 무지개BOOKS)

◇조문판례(24년 8월/개정3판 2쇄: 무지개BOOKS)

◇객관식문제집(24년 2월/개정5판: 무지개BOOKS)

◇최신판례강의(24년 8월/개정3쇄: 무지개BOOKS)

【상 법 30문】

【문21】 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②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도 부담한다.
- ③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 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3.7.12. 2013다20571: 대판1996.8.23. 95다51915.=>**상법강의(109면), 조문판례(109면 문제2), 객관식(168면 문제139).**

②[X]: 대판 2019.2.14. 2016다245418, 245425, 245432(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상법강의(110면), 조문판례(110면 문제5), 객관식(168면 문제139).**

③[O]: 대판 1994.11.8. 94다23388(법적성질은 임대차·소비대차·매매 등이 혼합된 특수한 내용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상법강의(109면), 객관식(168면 문제139 1번 해설).**

④[O]: 대판 1995.9.29. 93다3417. =>상법강의(111면).

⑤[O]: 대판 1997.11.14. 95다11009(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22】 주주명부악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④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0.7.22. 2008다37193(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 =>상법강의(230면).

②[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대판 2018.10.12. 2017다221501(주주명부기재의 추정력). =>상법강의(231면), 조문판례(201면, 문제61).

③[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주명부기재의 구속력). =>상법강의(231면), 조문판례(201면 문제60).

④[O]: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주명부기재의 면책력). =>상법강의(232면), 조문판례(201면 문제59, 217면 문제11).

⑤[O]: 대판 2019.8.14. 2017다231980. =>상법강의(247면).

【문23】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

- ② 위 ①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고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임원퇴직금지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제·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②

<해설>

- ①[O]: 대판 1976.4.13. 74다1755.=>**상법강의(126면), 조문판례(119면 문제13).**
- ②[X]: 대판 2007.2.22. 2005다73020: 대판 1993.6.11. 93다8702(실질적 1인회사의 발생원인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다른 사원들이 명의대여를 하거나 1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 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상법강의(125면).**
- ③[O]: 대판 2007.2.22. 2005다73020.=>**상법강의(125면), 조문판례(117면 문제5).**
- ④[O]: 대고구법 1972.11.15. 71나556(타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발기인으로 내세워 정관에 기명 날인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까지 납입하여 회사설립행위를 마쳤다면 그 행위자 1인만이 발기인으로 주주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그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이상 1인 주주인 동시 대표이사인 사람이 회사 소유의 영업에 관한 유일한 재산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1인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배임되는 성립된다(대판 1983.12.13. 83도2330 전합).=>**상법강의(123~125면 참조).**
- ⑤[O]: 대판 2004.12.10. 2004다25123(임원퇴직금지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제·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상법강의(126면).**

【문24】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③ 주주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최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④ 주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3.9.10. 93도698. =>상법강의(278면 위에서 4줄③).

②[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 =>상법강의(277면/278면 위에서 5줄④).

③[X]: 대판 2003.7.11. 2001다45584(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O]: 대판 2003.7.11. 2001다45584. =>상법강의(278면), 조문판례(249면 문제75).

⑤[O]: 대판 1979.3.27. 79다19. =>상법강의(278면 위에서 8줄⑨).

【문25】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자본금 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다.
- ③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⑤

<해설>

①[O]: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상법강의(364~365면), 객관식(434면 문제391), 조

문판례(330면).

②[O]: 대판 2010.2.11. 2009다83599.=>**상법강의(365면), 객관식(433면 문제390), 조문판례(330면 12번)**

③[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상법강의(365면), 객관식(436면 문제394), 조문판례(330면 문제13).**

④[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상법강의(364~365면), 객관식(437면 문제395).**

⑤[X]: 대판 2021.7.15. 2018다298744(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강의(320면), 조문판례(290면 문제255).**

【문26】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사용인이다.
- (ㄴ)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ㄷ)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ㄹ)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ㄹ)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ㄹ),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ㄹ)

<정답>⑤

<해설>

(ㄱ)[O]: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항.=>**상법강의(13면), 조문판례(9면), 객관식(17면 문제23).**

(ㄴ)[O]: 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 제2항.=>**상법강의(14면), 조문판례(11면), 객관식(18면 문제26).**

(ㄷ)[X]: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제1항(다만 재판상행위는 제외된다).=>**상법강의(14~15면), 조문판례(12면), 객관식(22면 문제32).**

(ㄹ)[O]: 대판 1998.8.21. 97다6704.=>**상법강의(15면), 조문판례(13면 문제29), 객관식(23면 문제33).**

(ㄹ)[O]: 상법 제9조(소상인).=>**상법강의(7면), 조문판례(7면), 객관식(6면 문제6).**

【문2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 ②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 ③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06.6.30. 2006다19672,19689. =>상법강의(418면).

②[O]: 대판 2001.11.27. 99다33311. =>상법강의(423면), 조문판례(432면 문제56).

③[O]: 대판 2001.11.27. 99다33311. =>상법강의(424면).

④[X]: 대판 2003.11.13. 2001다49623(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법강의(423면).

⑤[O]: 대판 1997.9.26. 97다4494. =>상법강의(424면).

【문28】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 ②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

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 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1970.3.10. 69다 1370. =>상법강의(599면), 조문판례(595면 문제43), 객관식(646면 문제2).

②[X]: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법강의(602면 참조).

③[O]: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상법강의(602면).

④[O]: 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합. =>상법강의(628면), 조문판례(540면 문제79), 객관식(596면 문제23).

⑤[O]: 대판 2001.10.23. 99다64018: 대판 2003.5.30. 2003다16214. =>상법강의(625면), 조문판례(538면 문제63), 객관식(597면 문제25).

【문29】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상무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9.5.28. 98다34515. =>상법강의(16~17면).

②[O]: 대판 2006.6.15. 2006다13117. =>상법강의(17면), 조문판례(14면 문제36), 객관식(27면 문제40).

③[X]: 대판 1996.8.23. 95다39472(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상법강의(16면), 조문판례(14면 문제32), 객관식(29면 문제43).

④[O]: 대판 1990.1.23. 88다카3250: 대판 1999.5.28. 98다34515(경리부장은 부포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채무부담행위는 할 수 없다). =>상법강의(17면 참조).

⑤[O]: 대판 2008.7.10. 2006다43767. =>상법강의(17면), 조문판례(14면 문제37), 객관식(29면 문제43).

【문30】 주주총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
- (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 (ㄷ)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ㄹ)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②

<해설>

(ㄱ)[X]: 대판 2004.2.27. 2002다19797(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상법강의(279면), 조문판례(251면 문제89).

(ㄴ)[X]: 대판 1992.5.12. 92다5638(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상법강의(287면), 조문판례(301면 문제297), 객관식(406면 문제347).

(ㄷ)[O]: 상법 제328조(준용) 제2항·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2항: 상법 제190조(대세효). =>상법강의(279면), 조문판례(187면 문제79), 객관식(335면 문제245).

(ㄹ)[O]: 대판 2003.7.11. 2001다45584. =>상법강의(278~279면).

【문31】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지만,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된다.
- 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ㄷ.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이다.
- 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 ㅁ.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ㄱ, ㄹ, ㅁ

<정답>④

<해설>

(ㄱ)[X]: 대판 2023.6.29. 2021다291712(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상법강의(315면), 조문판례(284면 문제225), 객관식(382면 문제312), 최신판례강의(15~16면).

(ㄴ)[X]: 문제오류: 대판 2005.7.28. 2005다3649->판례변경(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엄격히 말하면 틀린 지문이다.

(ㄷ)[O]: 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합(전단적 대표행위).=>상법강의(300면), 조문판례(270면 문제170), 객관식(368면 문제293), 최신판례강의(38~39).

(ㄹ)[X]: 대판 2021.8.26. 2020마5520(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상법강의(300면), 조문판례(269면 문제167), 객관식(368면 문제293), 최신판례강의(40~42면).

(㉠)[O]: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상법강의(315면), 조문판례(283면), 객관식(386면 문제318).**

【문32】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②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위탁매매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 ④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1994.4.29. 94다2688.=>**상법강의(89면).**

②[O]: 대판 2011.7.14. 2011다31645.=>**상법강의(90면), 조문판례(82면 문제6), 객관식(140면 문제98).**

③[O]: 대판 2008.5.29. 2005다6297.=>**상법강의(89면), 조문판례(81면 문제2), 객관식(140면 문제98).**

④[X]: 대판 1996.1.23. 95다39854(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상법강의(60면), 조문판례(56면 문제56), 객관식(104면 문제44).**

⑤[O]: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상법강의(90면), 조문판례(82면), 객관식(143면 문제102).**

【문33】 청산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 ③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 ④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 ⑤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⑤

<해설>

①[O]: 대판 1991.12.24. 91다4355. =>상법강의(287면).

②[O]: 대판 2005.4.15. 2003도7773.

③[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 전합. =>상법강의(158면).

④[O]: 대판 1991.11.22. 91다22131. =>상법강의(157~158면 참조).

⑤[X]: 대판 1991.11.22. 91다22131(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34】 주식회사 甲의 다음 행위 중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회사 甲이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5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였는데,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발행하는 행위
- (ㄴ) 임원 A와 퇴직합의를 체결하면서 A가 보유한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주식회사 甲이 매수하게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甲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 약정에 기한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행위
- (ㄷ) 주식회사 甲이 주주 B로부터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 (ㄹ)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甲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 (ㅁ)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C, D가 공유하는데, 그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으로 권리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甲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C에게만 주주권 행사 관련 통지를 하는 행위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정답>⑤

<해설>

(ㄱ)[불가]: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1항(액면주식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강의(212면), 조문판례(188).**

(ㄴ)[불가]: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과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규정에 위배한다. 대판 2021.10.28. 2020다208058(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상법강의(242면), 조문판례(210면 문제97), 객관식(290면 문제176), 최신판례강의(31~33면).**

(ㄷ)[허용]: 대판 1996.6.25. 96다12726(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강의(243면), 조문판례(210면 문제96), 객관식(288면 문제173).**

(ㄹ)[불가]: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2항(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강의(270~271면), 조문판례(238면), 객관식(288면 문제173).**

(ㄴ)[허용]: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2항(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상법강의(213면), 조문판례(191면), 객관식(245면 문제111).**

【문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 ③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④ 어음발행인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⑤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02.4.26. 2000다42915(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강의(641면), 조문판례(552면 문제56), 객관식(610면 문제44).

②[O]: 대판 1998.4.23. 95다36466 전합.=>상법강의(618면), 조문판례(528면 문제18), 객관식(581면 문제1).

③[O]: 대판 2017.2.3. 2016다41425.

④[O]: 대판 2005.3.24. 2004다71928.

⑤[O]: 대판 1998.11.24. 98다33154.

【문36】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 ③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상법강의(249~250면), 조문판례(205면).

②[X]: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상법강의(251면), 조문판례(206면 문제81-82), 객관식(295면 문제184).

③[O]: 대판 2011.3.24. 2010다85027.=>상법강의(252면), 조문판례(207면 문제83), 객관식(293~294면 문제182).

④[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상법강의(252면), 조문판례(206면 문제82), 객관식(293~294면 문제182).

⑤[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상법강의(251면), 조문판례(206면 문제81), 객관식(293~294면 문제182).

【문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 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②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나,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운송주선인은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 ④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 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②[X]: 대판 2017.6.8. 2016다13109(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O]: 대판 1987.10.13. 85다카1080.=>상법강의(92~93면), 조문판례(86면 문제3), 객관식(147면 문제107).

④[O]: 대판 2007.4.27. 2007다4943.=>상법강의(94면), 조문판례(87면 문제5), 객관식(147면 문제107).

⑤[O]: 대판 2007.4.27. 2007다4943.=>상법강의(92~94면 참조).

【문38】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 또는 상법 제86조의2의 합자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③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가능하다.
- ④ 시설투자자에게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 거래관계는 타방(경영자)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에게만 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약정한 동업관계의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 ⑤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에 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X]: 상법 제86조의7 제1항(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상법강의(83면), 조문판례(72면), 객관식(127면 문제77).

②[O]: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3항.=>상법강의(82면), 조문판례(72면), 객관식(127면 문제77).

③[X]: 상법 제86조(준용): 상법 제272조(익명조합원의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현물에 한정된다).=>상법강의(79면), 조문판례(70면), 객관식(121면 문제68).

④[X]: 대판 1983.5.10. 81다650(익명조합에서 이익의 분배는 반드시 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익명조합의 본질에 반한다).=>상법강의(78면), 조문판례(68면 문제3), 객관식(121면 문제68).

⑤[X]: 상법 제82조 제1항(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강의(79면), 조문판례(69면), 객관식(122면 문제69).

【문39】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ㄴ) 회사와 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면, 그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ㄷ)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ㄹ)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③

<해설>

(ㄱ)[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상법강의(216면), 조문판례(239면 문제34), 객관식(251면 문제120), 최신판례강의(103~105면).

(ㄴ)[X]: 대판 2023.7.13. 2021다293213.=>상법강의(218면), 조문판례(240면 문제39-40), 객관식(252면 문제121), 최신판례강의(106~108면).

(ㄷ)[X]: 대판 2023.7.13. 2022다224986.=>상법강의(216~217면), 조문판례(239면 문제35), 객관식(251면 문제120).

(ㄹ)[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상법강의(217면), 조문판례(240면 문제36), 객관식(251면 문제120), 최신판례(103~105면).

【문40】 상법상 상사유치권(제58조) 또는 유질계약(제5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 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 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상법강의(65면), 조문판례(52면 문제39), 객관식(91면 문제23), 최신판례강의(22~23면).

②[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상법강의(65면), 조문판례(53면 문제42), 객관식(92면 문제25), 최신판례강의(22~23면).

③[O]: 대판 2012.9.27. 2012다37176.=>상법강의(64면), 조문판례(51면 문제31), 객관식(90면 문제21).

④[X]: 대판 2017.7.18. 2017다207499[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59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법강의(65면), 조문판례(52면 문제39), 객관식(92면 문제25).

⑤[O]: 대판 2017.7.18. 2017다207499.=>상법강의(65면), 조문판례(53면 문제40), 객관식(93면 문제26).

【문41】 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ㄴ)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ㄷ)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①

<해설>

(ㄱ)[X]: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강의(440면), 조문판례(440면), 객관식(521면 문제35).

(ㄴ)[O]: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2항.=>상법강의(441면), 조문판례(439면), 객관식(521면 문제36).

(ㄷ)[O]: 상법 제669조 제4항.=>상법강의(441면), 조문판례(439면), 객관식(521면 문제36).

(ㄹ)[O]: 상법 제674조(일부보험).=>상법강의(443면), 조문판례(443면), 객관식(524면 문제41).

【문42】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정답>①

<해설>

①[O]: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상법강의(43면), 조문판례(32면 문제8), 객관식(73면 문제113).

②[X]: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

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상법강의(43면), 조문판례(32면 문제7), 객관식(73면 문제113).

③[X]: 대판 2002.3.29. 2000두8455(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상법강의(45면), 조문판례(32면 문제11), 객관식(64면 문제100).

④[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강의(47면), 조문판례(31면), 객관식(62면 문제97).

⑤[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2항(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상법강의(47면), 조문판례(31면), 객관식(62면 문제97).

【문4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차계약이 성립한다.
- ④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⑤

<해설>

①[O]: 대판 1999.2.5. 97다26593.=>상법강의(84면), 조문판례(74면 문제2), 객관식(131면 문제85).

②[O]: 대판 2011.11.24. 2010도5014.

③[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④[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⑤[X]: 대판 2023.12.14. 2022다208649(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44】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③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정답>③

<해설>

- ①[O]: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상법강의(353면), 조문판례(311면 문제1), 객관식(419면 문제368).
- ②[O]: 상법 제423조(납입해태의 효과) 제2항.=>상법강의(356면), 조문판례(319면 문제26), 객관식(425면 문제378).
- ③[X]: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제1항(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강의(356면), 조문판례(319면).
- ④[O]: 상법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2항.=>상법강의(355면), 조문판례(318면),
- ⑤[O]: 대판 1995.5.23. 94다36421.=>상법강의(352면).

【문45】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 해태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②

<해설>

- ①[O]: 대판 2021.5.7. 2018다275888.=>상법강의(321면), 조문판례(290면 문제256), 객관식(393면 문제328), 최신판례강의(45~46면).
- ②[X]: 대판 2021.5.7. 2018다275888(이행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상법강의(321면), 조문판례(290면 문제256), 최신판례강의(45~46면).
- ③[O]: 대판 2007.7.26. 2006다33609.=>상법강의(319면), 조문판례(287면 문제243), 객관식(392면 문제326).
- ④[O]: 대판 2006.12.22. 2004다63354(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상법강의(322면), 조문판례(289면 문제253), 객관식(393면 문제328).**

⑤[O]: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상법강의(318~319면), 조문판례(287면), 객관식(390면 문제323).**

【문46】 상법상 영업장부와 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② 상인은 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 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제2항.=>**상법강의(32면), 조문판례(24면), 객관식(50면 문제77).**

②[O]: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제1항.=>**상법강의(32면), 조문판례(24면), 객관식(50면 문제77).**

③[O]: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제1항·제2항.=>**상법강의(37~38면), 조문판례(26면), 객관식(51면 문제78).**

④[X]: 대판 1983.12.27. 83다카331(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상법강의(40면), 조문판례(27면 문제12), 객관식(56면 문제87).**

⑤[O]: 대판 1996.10.29. 96다19321.=>**상법강의(40면), 조문판례(28면 문제18), 객관식(57면 문제89).**

【문47】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무효이다.
- ②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

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강의(419면), 주문판례(427면), 객관식(508면 문제18).

②[O]: 대판 2008.1.31. 2005다57806.

③[O]: 대판 2018.4.12. 2017다229536.=>상법강의(411~412면).

④[O]: 대판 2006.1.26. 2005다60017,60024.=>상법강의(412면), 주문판례(424면 문제32), 객관식(499면 문제4).

⑤[O]: 대판 1999.3.9. 98다43342.=>상법강의(412면), 주문판례(422면 문제17).

【문4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丙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乙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乙이 丙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乙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 창고업자인 甲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
- ④ 운송주선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11.4.14. 2010다91886(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법강의(29면), 주문판례(22면 문제27), 객관식(44면 문제68).

②[O]: 대판 2023.12.7. 2020다225138.=>주문판례(38면 문제37), 최신판례 강의(100~101면).

③[X]: 대판 2004.2.13. 2001다75318(상166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법강의(107면), 조문판례(107면 문제 6), 객관식(166면 문제136).

④[O]: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상법강의(93면), 조문판례(88면).

⑤[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최신판례강의(139~140면).

【문49】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 ③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⑤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5.9.10. 2015다213308: 대판 2015.7.23. 2014다236311(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상법강의(289면), 조문판례(264면 문제140), 객관식(351면 문제268).

②[O]: 대판 2016.1.28. 2014다11888. =>상법강의(290면), 조문판례(266면 문제147), 객관식(351면 문제268).

③[O]: 대판 2019.7.4. 2017다17436. =>상법강의(290면), 조문판례(265면 문제143), 객관식(352면 문제269).

④[O]: 대판 1979.11.27. 79다1599. =>상법강의(291면), 조문판례(265면 문제145).

⑤[O]: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상법강의(288면).

【문50】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을 합병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④

<해설>

- ①[O]: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상법강의(135~136면), 조문판례(374면), 객관식(470면 문제446).
- ②[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2항.=>상법강의(136면), 조문판례(374면).
- ③[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3항.=>상법강의(136면), 조문판례(374면).
- ④[X]: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항(간이합병은 주식매수청구 가능하다). 상법 제527의3(소규모합병) 제5항(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강의(136면), 조문판례(372-374면), 객관식(471면 문제447).
- ⑤[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1항 후단.=>상법강의(136면), 조문판례(374면), 객관식(473면 문제451).